

야권 “무능력·무책임·무대책만 재확인” 거센 비판

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반응

민주당 “변명, 오만·독선으로 넘쳐”
혁신당 “동문서답… 끌어내려야”
與 “진술·소탈, 많은 의구심 해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오만과 독선”, “민심 임계점”, “탄핵만이 답”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골몰한 담화로 지난 2년 반 동안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맹폭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동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용민 의원은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기 앞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조 대변인은 “(탄핵 논의는) 특검법을 관철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마디로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다”며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레 국민을 꾸짖었다”며 “대통령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은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끝이났다”며 “국민께서 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단언컨대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라며 “이제 민심의 태풍을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풀이해 보면 ‘아내가 사과하라고 해서 한다’, ‘죄송하긴 한데 악마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내의 조연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갈 테니 잘 봐달라’는 것”이라면서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책인 3무 대국민담화”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수용을 재차 거부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관철하기 위해 대야 투쟁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반면,국민의힘은 “다양한 정치 현안과 국정 전반 이슈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회견”이라고 야당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했다”며 “국민께 격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고,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국정의 미흡함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겸허히 사과하셨고, 충분한 현장 답변을 통해 많은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주권자 힘 보여달라”… 2차 집회 독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2차 장외 집회의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가오는 11월 9일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서울)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의 손으로 다

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비판과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등과 연대해 시민촛불행진을 하는 것을 것을 검토했으나 시민사회의 탄핵·하야·개헌 등 정권 퇴진 구호에 부담을 느끼고 단독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이재명 “경제 회복 핵심적 역할” 의장에는 홍성국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내외 주요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성국 전 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가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며 “국가의 역할을 정말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 아쉬운 바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경제가 어렵다. 게다가 이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던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특히 서민 경제가 살아날 길을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당의 또 이 나라 국가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홍 전 의원은 “오즘 나라 안팎이 너무 시끄럽고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당 공식기구로서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 건의하는 것이 이번 국가경제자문회의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각계 전문가 30명 정도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시 공론화 공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경제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 지성을 목표로 운영하겠다”며 “주기적으로 논의 내용·정책 대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운영방향으로 △대기업·소상공인·에너지 등 분야 전문가 통해 대안 제시 △필요 시 다양한 간담회 등 마련해 여론 형성 △당 요청 정책 이슈 연구 △민간 부문 참여 확대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향후 현장 전문가 추가 구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트럼프와 당선 축하 통화 “이른 시일내 회동”

북한군 우크라 파병 공유 “긴박한 전환 우려”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당선 축하 통화를 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가(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끌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

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기간 동안 한미일 간 협력을 잘 다져놓은 기여도 있다”며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양국이 인태지역, 한반도,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건조 능력 알고 있으며, 보수

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중인 북한 군사동향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긴박한 전환에 대해 우려를 공감했다.

북한 핵미사능력, ICBM 발사,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오물풍선 낙하, 서해상에서의 GPS교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장은 “양측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만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명노 시의원 “광주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광주지역 산후조리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노(사진) 광주시의원은 7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부재와 급격한 산후조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열악한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하며,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광주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은 370만원으로 서울의 433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225만원과 비교할 때 광주의 산후조리원 가격은 5년 새 64.4% 증가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치다. 이 의원은 “광주는 출생 정책과 어린이 돌봄 정책에서 선진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지만, 산후 문제를 방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적정성 검토 등을 조사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정다은 시의원 “아동·청소년 대물림 방지 사업 추진 안돼”



광주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사진) 광주시의원은 7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더 이상 아이들의 불운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광주의 아이들이 빚 상속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